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개막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집중 추궁... “‘끝장 국감’으로 만들 것”

김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등 증인·참고인 100명에 출석 요구 불출석 대비 ‘동행명령장’ 계획도 추경호 “野 정치공세에 맞설 것”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관한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청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인물은 55명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불법적 대통령 집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관저 이전 논란 ▲코바나 뇌물성 협찬 및 전세권 설정 사건 등과 관련한 일반 증인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구대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대에 올랐다. 또한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불기소 판단을, 최재영 목사에 기소 판단을 내렸던 것과 관

련해 강일원 수심위원장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도 다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끝장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은순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 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청문회나 일반 안전 심의로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예고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끝장 봐야 할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와 정쟁 물리로 만드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감”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감 기조에 대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만찬 패싱·공격 사주 의혹... 尹-韓 갈등에 이탈표 ‘꿈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김건희 특검법서 興 이탈표 4표 나와 당 안팎서尹 탄핵저지선 붕괴 우려 정권 재창출 영향... 갈등 커져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만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만찬 패싱’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만찬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빠지면

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또,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더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한만큼, 녹취록 공개의 여진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만찬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 여파’ 등 대통령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친한계 의원들과 갖는 자리다. 친한계에

선 김 여사 이슈로 팍 막힌 정국을 풀어 내기 위해서는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야당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끝에 최종 폐기됐으나,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여당의 분위기는 술렁였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자고 강조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유지하고 있는 탄핵저지선(100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4선 중진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

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합해서 야당공격 대처하라고 대표시켜 줬더니,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한 시중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데도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당내에서 계파를 불문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 대책, 현장서 유명무실”

산업부, 자진신고·언론보도 없이는 산업기술유출 여부 인지·조치 불가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

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

(최고경영자)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닌지 의심된다.

최근 5년간 실시된 71번의 실태조사 가운데 산업부는 주무관 1명이 33회 참석하는데 그쳤다. 반면 해외 사업소의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같은 기간 28번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산업부 과장과 서기관 등이 24회 참석했다.

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자료도 현장과는 괴리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반도체 기업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됐거나 유출 전에 기업이 먼저 적발한 경우는 9건이었지만, 산업부가 과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실시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	6회	코로나19 실태조사 미 실시	12회	15회	38회
	2회 (33%)		0회 (0%)	6회 (40%)	25회 (66%)
해외	12회	10회 (83%)	2회	7회	7회
	2회 (100%)		7회 (100%)	5회 (71%)	

〈최근 10년간 반도체 침해신고 현황〉

기업	총 신고건수	산업부 접수
OO사	6건	2건
XX사	3건	0건

/산업통상자원부

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2건에 불과했다. 산업부가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 기간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이

산업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2~3달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줄 소지가 있다.

/박태홍 기자